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용 승 (대구대학교)
(leeyongseung@daegu.ac.kr)

국문요약

2만 9,137명. 2016년 3월 국내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이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하여 북한 체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나날이 늘 것이라는 전망은 대단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 전에 그들은 누구이고, 차별의 작동방식은 어떠한가.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해 위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위상을 태생적 이중성과 성질상의 이중성으로 규정하고, 남한 사회에서 갖는 그들의 내포를 살펴보았다. 그들 존재가 갖는 함의는 통일 과정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타자로서 열린 민족주의의 맹아,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잣대, 한반도 역사 비극의 상징, 탈경제 경험의 체화자 등으로 제시했다. 차별의 작동방식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 인식, 저개발 국가를 낮게 보는 시선, 잠재적 불안, 유사성에 따른 역차별, 포용 의무감, 이중적 배제 등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차별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2류 시민 양산, 통일 지향성 축소, 동아시아 담론의 형해화 등이 제시된 이유이다. 대안으로는 남한 주류의 인식을 성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전제 아래 소수자로서 북한이탈주민 재규정,

* 이 글은 경남하나센터와 경남지역통일교육센터 주최 토론회(창원대, 2016/4/29)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부터 귀중한 조언을 얻었다. 이 자리를 빌려 대구대 최영태, 양승권, 주영중, 이소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용어의 변경, 이물감과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 약자 보호 시스템의 정비, 주민권 담론, 정체성 인정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할 미래 가치는 ‘품위’라는 관점에서 품위 있는 통합을 위한 몇 가지 시론적 의견을 담았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북한이주 주민), 차별, 사회통합, 주민권, 품위있는 사회

I. 문제의식

2만 9,137명. 2016년 3월 국내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이다(통일부 홈페이지 참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대북제재의 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는 중국의 북한 식당 종업원이 단체로 입국한 사례도 있었다. 경제와 안보를 비롯하여 북한 체제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나날이 늘 것이라는 전망은 대단한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그 전에 그들은 누구이고, 차별의 작동방식은 어떠한가.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해 위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려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3%로 여전히 상당하다(연합뉴스 2015/09/29).¹⁾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과 성공적인 적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시험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이주민인 동시에 국적자이자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상이 서로 상승효과를 낸다면 좋겠지만 역으로 이주민 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입국과 동시에 국적 취득이 가능한 국민이지만 주류로부터 소외되는 위험도 있다. 실제 그렇다. 윤인진(2012)이 북한이탈주민을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의도하지 않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민으로 보고 제반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름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이주민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여하튼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1) 적은 일당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관계 데모에 동원되었다는 최근의 뉴스 보도(한겨레 2016/04/24 참조) 또한 이들의 고단한 삶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적취득절차가 생략되고, 곧바로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국적) 취득은 정착국 내에서 ‘통합’이라 불리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할 뿐”(새머스 2013:50)이다. 국적 갱신 자체가 이들이 남한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이 이들이 남한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된 감정(소속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국적 취득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주민에 비해서는 낫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적을 수월히 얻고 그에 따른 형식적 시민권의 향유 주체이지만 실질로는 낯선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더한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단지 “남한체제로 흡수 내지는 동화시키려는”(권숙도 2014, 101) 일방적 접근을 극복하고, 사회통합²⁾의 본래 뜻에 부합하는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와 위상을 갖는 사람들인지 더듬어 볼 것이다. 이어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전 검토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했다. 차별의 작동방식은 대안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품위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서술했다.

Ⅱ.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가?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4절에서 제시할 대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첫 번째로는 태생적인 위상의 이중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볼 요량이고, 두 번째로는 성질상의 이중성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내포하는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한다.

먼저 태생적 이중성. 북한이탈주민은 익숙한 공간과 장소를 떠나 새로운 곳(혹은 국가)에 동지를 튼 이주민인 동시에 한민족으로 규정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이후 정보기관의 조사와 남한 주민이 되기 위한 집합교육을 받고 나면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족관계 등록이 가능하다. 이들의 국적은 이미 한국이었던 것으로 의제된다. 다른 이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인 법적 시민권 획득이 비교적 수월하다.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추방의 위험도 거의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들은 다른 이주민과 달리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과 완전한 동화를

2) 사회통합의 의미는 이용승(2016:7-9) 참조.

요구받는 이주 집단”(이수정 2011: 67)이기도 하다. 다른 부류의 이주민은 다문화주의³⁾의 이름으로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것이 허용되고, 나아가 권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기억과 전승, 익숙한 문화, 관습과 관행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지만 적어도 어색한 일로 간주된다. ‘한민족’이라는 담론의 효과이다. 이들은 이주민과 주류 한민족(남한 주민) 사이에 끼인 존재와도 같다.

두 번째 이중성은 그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입국한 것인지 혹은 북한 체제에 대한 혐오로 ‘탈북’⁴⁾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른 의미의 이중성이다. 전자는 유민에 가깝고 후자는 난민⁵⁾에 근접한다. 또한 전자는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서 연민, 동정의 정서와 연결되고, 후자는 체제 우월의식과 보호(asylum)의 필요를 낳는다. 이는 정부가 이탈주민과 그 가족의 신변안전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조용히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다가도 필요한 때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문명이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에서 ‘NORTH KOREAN REFUGEES’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법령 본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영문명에 포함시킨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을 난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정부 혹은 입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들의 지위를 무엇으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똑같은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 의도와 목적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내포를 가질까. 먼저 그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이후 한국과 통일 한반도의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의미를 갖는다. 통일이 단지 근대 민족국가의 완성, 민족 동질성의 회복, 영토와 체제의 통합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적대로 인한 모순을 극복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과정”(이수정 2011: 74)이라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내 삶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얻는다. 즉 통일이 공국의

3) 한국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4) ‘탈북자’라고 호명할 때 흔히 표현되는 ‘탈북’은 행위자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단어이다. 지금도 간혹 쓰이는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것을 가린다면서 반발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5) 한국의 난민법 2조에서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난민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이 될 수 없다. 참고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는 외국인이 아니라 ‘사람’(pers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점을 향한 내달음이 아니라 체제 통합 전후 장기에 걸쳐, 분단으로 인해 누적된 적폐와 고통, 아픔을 치유하는 기나긴 과정이라고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의 통일역량을 가늠하는 시험지와 같은 위상이 부여된다. 우리 사회가 고작 3만 여명에 불과한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소통과 연대를 통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대한 전범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통일을 주장할 수 있는 주요 근거를 잃어버린다. 이 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제기하는 도전은 시대성을 획득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에게 통일 이후 한반도 미래의 전개를 묻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폐쇄적 민족주의를 마감하고, 성찰적 민족주의 내지는 열린 민족주의의 맹아를 싹틔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같은 민족일지라도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그로 인해 문화적 이질성이 심할 경우 차별할 정도로 닫혀 있다. 동질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은연중에 ‘민족 내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는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근본문제”가 “민족적 동질성-동포애-통일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서유경 2013:19)고 비판하기도 한다. 오랜 분단을 거친 이후 현재 상태의 이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인데, 프레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관건은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이질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시론적으로 말해보자면 민족적 동질성은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다양성이나 다중적 정체성을 억압”(백영서 2013:50) 하는데 이르러서는 안 된다. 문화적 차이는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그 동질성도 유동하는 것이어야 하며, 변화와 재구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동질을 요구받는 개별 성원들이 그것에 대해 발언하고 수정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럴 때라야 동질성에 대한 요구가 폭력으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가 이러한 대안의 민족의식을 주조해낼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류의 입장에서 보면 타자이다. 정책 당국의 입장에 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이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집단으로 구성해낸다. 혜택을 주겠다는 선의이지만 구분된 사람은 쉽게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차별은 그 대상을 지목하고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⁶⁾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잣대로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통일 이후를 예비하는 시험대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어떠한 성질의 것인가는 동아시아공

6)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친절한 무시’(benign neglect)와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의 변증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동체를 구상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된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 전체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통일 한반도의 국가형태, 국가 관계, 남북의 문화가 융합되어 생성될 새로운 문화는 그 영향의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다. 통일 이후 수립될 새로운 국가는 “분단체제의 모순에 저항하는 실용적이고 창의력 있는 실천을 통해 이룩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치공동체이다.”(백영서 2013:50). “한반도에 형성될 국가연합이 동아시아 공동체에 필수적”(백영서 2013:52)이라면 새로운 국가건설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의 시험대이기도 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보다 거시적으로 한반도 역사 비극의 산물이자 상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을 두고 상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냉담한 이유는 무의식중에 그 상처를 알아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쾌한 사람은 없다. 외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상처는 마음을 다해 마주 보아야 치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관계가 본격적인 통합과정에 돌입하게 된다면 더욱 곤란한 처지에 내던져질 위험이 있다. 남북이 화해와 평화공존의 긴 과정을 통해 점진적 통합에 합의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차하면 이들은 남북 모두로부터 계급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동·서독의 경험에서 유추해 본다면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대규모 이주는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삶이, 그리고 그들과 남한 주민 간의 관계가, 오랜 후에 남한으로 내려올 사람들에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야만 그들은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 또한 통일 이후를 구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⁷⁾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동아시아,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견고한 국가경계를 횡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주가 일상화되고 있는 지구화 시대에 이들의 험한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될 수 있다. 탈근대와 지구화의 만남이 어떠한 국제질서를 형성하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국경과 민족 공동체의 단단한 껍질이 다소 이완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두 국가 내지는 세 국가를 횡단한 북한이탈주민의 체험을 이해하고, 이와 연대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형태와 국민국가 간 관계를 상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경계 경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멀리 돌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남북의 분단선을 넘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에서

7) 물론 통일 이후 남한으로 내려오는 대규모 북한 출신 사람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지금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규모와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으로 남한에서도 북한으로 이주할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통일 이후 남북 주민 관계를 가늠하는 하나의 선례이자 실험사례로 인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유용성도 있다고 본다.

독특한 상징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남한 사회에서 이들은 남북 체제경쟁에서 북한이 패배했다는 상징이 되기를 은연 중 요청받는다. 그러한 남한 주류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은 남한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한 방식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자기의 경험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들이 떠난 북한체제를 비하하고 남한사회를 도에 넘치게 옹호하는 경향은 이와 연관이 깊다.⁸⁾ 이러한 태도는 아래에서 말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물론 그들의 북한 비하가 탄탄한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⁹⁾

Ⅲ. 차별의 작동방식

3.1. 차별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편견과 냉담한 시선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들이 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른 소수자보다 더한 차별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은 몇몇 언론보도를 찾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 분단 현실에서 갖는 특별한 위상 등이 이들의 기대감을 높였을 것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은 좌절의 골을 더욱 깊게 했을 것이다. 많지는 않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일 게다. 차별은 대상을 특정하고 그것이 관념적 상상으로 이미지를 형성할 때 작동한다. 여기서의 이미지는 실재이기보다는 환상에 가깝다. 이를 통해 소수자는 배제될 수 있는 객체가 된다. 환상은 실상이 알려지면 사라질 단지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환상 내지는 환영 또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구성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떤 환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환영은 사회적 구성물이 된다. 그것이 구성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살피고 맥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재구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 사회의 어떠한 요인이 이들에 대한 환영을 만들어내고 차별로 내모는가?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과 부정적 인식은 북한출신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 인식과 밀접하게

8) 이 글이 발표된 토론회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그 중 한 분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등을 아버지로, 하나센터를 어머니로 표현하였다. (준)국가기관을 부모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풍경이다.

9) 이렇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극우 집회에 쉽게 동원되고, 참여하는 일부 원인이 해명된다.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 70여 년간 체제와 이념대립의 일방 당사자였고, 현재도 그렇다. 북한은 현실적인 주적이자 남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원천이다.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건재하고, 휴전상태라는 객관적 현실을 고려해보면 북한에 대한 부정인식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최근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은 이러한 효과를 강화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남북의 호전적 말다툼 등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그에 기초한 교육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 강화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투영된다. 간혹 북한 인민과 지도층을 분리하고 남한의 주적을 지도층에 국한하려는 시도가 있다. 인민은 포용하고 지도층에 대해서는 적대한다는 논리인데,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이는 실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그들이 겪는 차별이 웅변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부정 인식 외에도 북한을 얕잡아 보는 인식은 북한 출신의 ‘국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낮추어 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후진성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인식은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 국민 다수의 시선과 다르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대개 가난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무능력을 상징하고 비난과 무시의 대상이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실상이 그렇다. 개인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이 “자본주의적, 생산주의적 ‘능력’ 또는 ‘업적’ 원리”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장은주 2008:25).¹⁰⁾ 북한이탈주민은 못 사는 국가 출신이자, 남한에 들어온 이후에도 계층상 하층에 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류의 인식은 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구조를 향하지 않는다. 결과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서 가난은 개인 혹은 그 개인이 구성원인 집단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고, 그러한 인식의 끝에는 차별과 멸시가 기다린다. 비루한 인식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편견이지만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치안담론은 아니지만 남한 사회의 막연한 잠재적 불안요소로 보는 시각 또한 이들을 차별하는 감정을 낳는다. 실재가 그렇지 않음에도 이들을 떠올릴 때 더께처럼 따라붙는 막연한 불안이 있다. “이주민을 ‘불법체류자’와 동일시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왜곡된 시각”(이용승 2016:12)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성은 있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사회적 하층 계급을 떠올릴 때 나서는 이미지와 일맥상통한다. 막연한 불안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소수자 혹은 약자를 잘 보살피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 내지는 경험에 기초한 확신과 연동되어 있다. 계층 상승의 기회구조가 점차 닫히고

10) 이러한 원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개인에 대한 법적 존중의 원리를 위협하여 속물주의적 반평등주의 경향을 강화한다고 장은주는 말한다. 그 경향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수자를 비껴가지 않는다.

있는 현실은 현재의 하층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하고, 그들을 향한 불안 감정을 북돋는다.

일면 선한 의지의 발현일 수 있는 연민이나 동정은 어떤가. 연민 또한 그들을 연대 가능한 동등한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타자 내지는 불쌍한 이웃으로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민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사회적 경계를 허무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민이나 동정은 대개 아래로 향한다. 즉 우월한 사람 혹은 스스로를 그렇다고 간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연민은,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월감의 배출구 기능을 한다. 연민의 주체가 그 대상과 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왜냐하면 연대와 유대관계는 동등성과 동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정을 받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기 어렵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도 어렵다. 더욱이 그들이 소수자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존감이 자신에 대한 태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에 의존한다.”(마갈릿 2008:140) 타자로부터 연민과 동정의 시선을 받아내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는 도대체 쉽지 않다.

북한이탈주민은 여타의 이주민과 달리 낯한 주민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받는다. 일종의 투사가 그 원인인데, 보통의 경우 인간은 자기 내면의 부정적 모습 혹은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것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이유로 삼는다.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드러날까 불안한 자기 내면의 어떤 특성을 외부로 투사하거나 타인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굳이 찾아낸다. 두 번째 투사는 자신이 겪는,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회구조의 부당함을 다른 소수자에게 곧바로 투영하는 것이다. 일종의 희생제 의와 유사하다. 거대한 구조보다는 희생양을 찾아 구조에 대한 불만을 그들을 매개삼아 터뜨린다. 투사할 타자와 희생양은 될 수 있으면 자기와 여러모로 유사한 사람일수록 좋다. 그래야 투사가 쉽다. 우리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이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투사는 꼭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소수집단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문화적, 민족적, 인종적, 국가적, 역사적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오히려 관용의 여지가 있다.¹¹⁾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출신이고, 분단으로 인해 문화적 이질화가 상당하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차별점을 찾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가장 가깝고 유사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11) 이는 비교우위를 말할 뿐,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게 대체적으로 포용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외려 그 반대이다.

같은 국민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이주민과 유사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¹²⁾는 또 있다. 그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심리가 불거지는 듯하다. 대부분의 남한 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국민’이 남한행을 요구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다르다. 수용이 곧바로 의무로 연결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보다 일반적으로 차이에 대한 개인적 불관용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 근래 한국 사회는 조그만 차이도 용인하지 못하는 성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장애, 성적 지향, 가족형태, 말투, 계층, 성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아파트 평수 등 차별을 낳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차별당할 수 있는 요인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이들에 대한 ‘이물감’은 차별을 더욱 공고화한다.

현실 정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이중적 배제에 직면해 있다. 즉 한국 정치의 두 축인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로부터 배제 혹은 소외되어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 특히 민족주의를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이념으로 활용한 바 있는 정치세력은 북한이탈주민을 알게 모르게 도외시킨다.¹³⁾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 민주당)의 모 의원이 “근본도 없는 탈북자”(한겨레/2012/06/03)라고 북한이탈주민을 비하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점의 일단을 보여준다. 진보진영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8-90년대 운동권의 민족해방계열은 민족주의 담론의 진보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반쪽에 대한 부정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보수진영 또한 다르지 않다. 보수진영은 북한이탈주민을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도구로 활용하는데 관심이 경도되어 있다. 사람을 도구화하고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관점은 그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12) ‘2014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과 차별실태조사’(윤인진 2015, 51)에 따르면 각 소수자별 사회적 거리감의 5점 척도 평균은 순서대로 북한이탈주민 3.2, 결혼이주여성 3.3, 외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서 사는 재외동포 3.3, 중국국적을 갖고 국내에서 사는 조선족 동포 3.3, 외국인 노동자 3.6으로 나타났다. 주류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른 소수자에 비해 다소 낮은 거리감을 보이고 있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13) 20대 총선의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약이 없고, 더불어 민주당은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한 줄 문구만이 들어가 있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통일준비”항목에서 “탈북민 자생력 향상을 위해 취업·교육 기회 대폭 확대”를 공약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다양한 가족 지원” 부분에서 “여성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라는 빈약한 공약이 있을 뿐이었다.

3.2. 차별은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차별의 작동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그렇다면 왜 배제가 문제가 될까. 이에 대한 해명은 남한 주류의 무의식적 차별과 배제, 의도하지 않은 의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후과를 낳을지를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2류 시민을 양산한다. 형식적으로는 ‘같은’ 시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위에 위치한 시민의 양산은 시민 간의 동등성을 훼손한다. 이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인 연대의 원리를 위협한다. 같은 맥락에서,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제는 민주주의의 훼손을 가져온다. 일반적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자 배제는 대체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선거참여만의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국민의 특정 부류, 그것도 분명하게 보이는 소수자(visible minority)가 정치과정에서 대표되지 못하고, 연대의 대상에서조차도 배제되어 있다면 그 민주주의는 커다란 공백을 허용하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소수일지라도 배제가 ‘허용된’ 집단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그 집단은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봉쇄, 혹은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신장 혹은 공고화와 같은 말이라고 본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통일 지향성의 축소로 이어진다. 지금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반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왜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부정적으로 되었는데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 자체로 또 다른 연구주제이다. 다만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돈다면 통일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가 하나 더 늘 수 있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한민족이 건설할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와 같다.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통일 한국에서 남북한 출신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고 1, 2등 국민으로 분화되어 서로 갈등하거나 북한이 내부 식민지와 같은 상황 연출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형태의 통일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확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과 동전의 양면이다.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다. 우리 사회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크고, 의지도 강했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렇게 대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 실패는 동아시아 담론의 형해화 내지는 주도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반드시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을 한국이 주도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분단과

그 해소, 새로이 건설될 통일 국가가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흔들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주요국가(북한) 출신 사람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주도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그 담론 자체가 형해화 될 위험도 있다. 같은 민족조차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의 전범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양한 민족국가(nation-states)들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담론¹⁴⁾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제가 이러한 의도치 않은 후과를 낳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통합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IV. 대안적 접근

윤인진(2012:40)은 이들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부각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남한주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름 의미 있는 시도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취약계층임이 분명하고,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어느 집단이나 조금은 보유하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배제와 고립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그런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왜 적응하지 못할까라는 회의감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안에 대한 논의는 그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를 그것대로 정직하게 인정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하나의 민족,’ ‘통일의 역군,’ “통일한국의 주춧돌”(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이라는 부추김 속에, 실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류의 차별과 낮추어 보는 시선,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 위한 하루하루 고단한 그들 삶이 가려질 수 있다. 전제가 이렇다면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남한주류의 부정적 인식과 고정관념, 편견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물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과 이를 위한 정책 시행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역시 핵심은 주류의 인식 문제이다. 주류의 인식 변화를 하루아침에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의 허위성

14) 쉰원의 ‘대아시아주의’에 대해 왕후이(2011:63)는 “아시아의 내재적 통일성은 유교나 어떤 단일한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문화로서 서로 다른 종교, 신앙, 민족, 사회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상한다면, 같은 민족인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동아시아 담론과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내지는 무의식적 의도성, 그것이 가져올 후과 등을 차분히 나누고 소통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해 제시된 몇 가지 성찰적 대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이자 한국 사회 소수자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특징으로부터 유래하는 언어 구사능력, 생물학적 동질성, 역사의 공유, 문화 습득 유용성 등을 고려한 정책은 필요하다. 이주민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게도 다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의 변경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는 이유는 용어는 정치·사회적 산물이지만 그것의 변경이 사회적 실천과 실재, 이념의 변경을 유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언어의 변화는 현실의 변화에, 현실의 변화는 언어의 변화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맺는다.”(나인호 2011:29).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 호명이 부정성을 갖는다면 호명된 주체는 부정성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물론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의 부정성을 말끔히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중립적인 용어의 사용은 호명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고, 호명되는 주체 또한 덜 위축될 것이다.

특정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하나의 명칭으로 호명할 때, 낙인효과의 문제, “타자화의 위험성”(이수정 2011: 65)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책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선의에 따른 명명일지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낙인효과를 낳을 수 있고, 그것 자체로 타자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새터민과 같이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서는 북한이주 주민(denizens from North Korea)이라는 용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¹⁵⁾

북한이탈주민에서의 ‘이탈’이나 탈북민 혹은 탈북자에서 “탈북이라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의 행위자성을 과거의 시점에 묶어”(이수정 2014:90)두는 것은 물론 ‘탈’(脫, escape)로 인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뉘앙스를 갖는다.¹⁶⁾ 반면 북한이주 주민은 현재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북한이주’는 출신지역과 의지에 따른 이동이라는 중립적 의미를

15)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혼용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윤인진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이주민은 결혼이주민, 노동이주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용어였던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된 ‘주민’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북한이주 주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16) 비교의 관점에서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에 대해 ‘Übersiedl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over(beyond) + settler의 구조이다. 매우 가치중립적이다.

찾는다. 다만 ‘북한’이라는 용어가 실체와 부정적 고정 이미지를 동시에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지만 반백년 이상의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현실에서 북한을 중립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찾기는 어렵다.¹⁷⁾ 현실적 사정을 고려한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주류가 느끼는 이물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물감은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가, 마치 당구공과 같이 단일하게 통합되어 있고, 견고하다는 가정에서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다. 그것이 단지 환상에 불과할지라도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성찰이 있어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런가? 이미 한국 사회는 대단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세계의 분화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람이든 문화이든 새로운 요소가 투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네 번째 대안으로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제안하고 싶다. 다문화사회에서 민족을 구성하는 것은 혈통 관념에서 점차적으로 언어, 다시 말하면 내밀한 소통 가능성과 그에 기반을 둔 공동체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생각해보자. 만일 한민족 혈통의 1/2, 1/4, 1/8, 1/16 등, 그 중 어디까지를 한민족 혈통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조합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누구도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민족국가 시스템에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공통의 언어에 기초한 소통 가능성은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그러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이물감을 느끼는 것은 기존 민족 관념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문화적 동질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해방 이후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기간이 이제 70년을 넘기고 있다. 휴전선의 엄중함만큼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은 확대되어 왔다. 남북의 다른 정치체제, 역사해석의 차이, 그에 따른 문화와 관행의 차이는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남한 주류의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대로 투영된다. 민족을 언어 중심으로 느슨하게 규정하는 것은 ‘우리’를 견고한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이물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의 두 번째 요소는 열린 민족주의이다. 열린 민족주의는 갈등과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기존의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의 인정과 공존, 연대를 지향한다. 민족과 민족의 우호적 만남을 기획한다. 이는 “문화적 조형물”(앤더슨 2002:23)로서 민족을 새롭게 상상해야만 가능한 과제이다. 또한 이는 이미 상당한

17) 법률 용어로서 ‘이북’이라는 표현이 있고, 간혹 사용되는 경우(이북 5도, 이북내기 등)도 있지만, 대중의 일상용어는 아니다.

문화적 이질성을 보이고 있는 남과 북, 그리고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⁸⁾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의 동등성 확보는 약자 보호 시스템의 견비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 혹은 약자 보호, 지원의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있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시스템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소수자 보호 담론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복지 논란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복지 논란이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 논쟁이나 재원 확보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아니라 단지 복지 그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섯 번째, 남한주민 혹은 주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기표는 이미 구별과 분리, 타자화를 예비한다. 이러한 구분과 분리에 삼투성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민권 담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일상생활과 생계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와 심리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용승 2016:14)으로 정의된다. 주민에는 당연히게도 주류와 비주류가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형식적 시민권을 결여하고 있는 이주민도 포괄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명칭에서도 주민으로 인정받고 있다. 주류와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주민으로 호명하고, 주민으로서 공히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제시할 수 있다면 분리와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만약 개인의 행위나 태도, 자질이나 속성 같은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 용인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개인은 결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힘들 것”(장은주 2008:22)이다. 긍정적 자기 이미지는 타인의 관점에 크게 의존하고, 역으로 자존감의 결여는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방해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다수 북한에서 태어나고 상당한 시간을 북한에서 보낸 이후 입국한다.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 변형된다. 그러나 그 변형된 정체성조차도 남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다를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8) ‘간격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틈새를 메워 가깝게 만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유점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문화주의 담론과도 맥이 닿는다. 이 글의 주제와 다소 동떨어지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의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증대를 어떻게 민족담론과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정(2011), 이용재(2014) 참조. 다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아무리 한국이 문화 다원화된 사회라고 한들 통일과정에서 민족주의는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과 외려 그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남북이 공유하는 민족 정서는 통일 과정의 자산이다.

V. “품위있는 사회”를 향한 통합

지금까지 북한이주 주민의 한국 내 위상, 이들에 대한 차별의 작동방식과 그 차별이 낳을 후과, 북한이주 주민의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결론에서는 본론 내용의 정리보다는 남한 주류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주 주민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상정된다. 민족은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 앤더슨 2002)이다. 이 개념규정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아래, 북한이탈주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상하기’를 통해 민족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친교 내지는 교감’(communion, 앤더슨 2002:25)의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상상의 주체는 남한주민과 이탈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상은 단지 하나의 민족이라는 당위론적 주장이나 통일 과정에서 이들이 발휘할 것으로 막연히 기대되는 역할이나 역량에 대한 강조로는 부족하다.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민족으로 재상상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같은’이라는 단어에는 동등성과 수평성이라는 의미가 녹아있다. 우리는 동등한 주체들과 연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민이나 애뜻한 감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주체와 주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연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처지는 연민이나 체제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일 뿐, 연대와 상호책임의 주체로서 상상되지는 않는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방안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동등성을 확보할 때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책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동등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치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2008:148)은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decent society)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마갈릿의 일같은 북한이주 주민을 바라보는 남한 주류의 시각을 곧바로 겨냥한다. 만약 북한출신이라는 북한이주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수치심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압축 성장과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모습은 ‘품위’라고 주장하고 싶다. 어떤 사회가 품위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채워야 할 내용이 상당하겠지만, 특정 부류의 국민이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회는 품위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 주류가 북한이주 주민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주 주민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품위 있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입장에 선다면 본문에서 제시한

대안 말고도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나치게 당위적 주장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고, 그 가치와 규범이 당위로서 제시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품위 있는 사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민주주의와 상통한다. 규범으로서 민주주의는 인민주권과 인민권력,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최소한의 조건을 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평등, 그리고 연대의 원리는 그것의 근간이 된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탈주민의 평등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또 하나 품위 있는 사회를 향한 북한이주 주민의 통합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이에 기초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사회의 품위를 고려할 때,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적 조건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 우리 사회를 품위와는 거리를 두게 했던 수많은 질곡은 분단으로부터 기인한 바 크다. 적대관계의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통일의 장기적 관점 아래 북한 현대사를 담담하게 기술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을 때, 북한이주 주민에 대한 객관화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서술하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미래의 북한출신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남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내면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대결과 적대가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객관적 서술만으로 우리 사회가 곧 무너질 것처럼 엽살을 피울 이유는 없다. 한국이 더 성취하고 교정해야 할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위협당할 만큼 부실하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북한이주 주민 정책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비극을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과 남한 입국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시적 구조를 간과할 수는 없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한반도 비극의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면 그 산물은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듬어 안아야 할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통일에 점차 관심과 흥미를 잃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당위적 주장이 큰 힘을 가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인식과 평가의 기준이 되고, 당위는 지향하는 바의 동기와 원칙이 될 수는 있을 게다. 분단으로 인한 역사적 비극을 성찰하고 조금씩 치유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은, 그리고 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조금씩 진척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를 품위 있게 만드는 좋고도 바람직한 출발이지 않을까?



- 권숙도. 2014.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23(1), 101-126.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서울: 역사비평사.
- 마갈릿, 아비샤이 저 · 신성림 역. 2008. 『품위 있는 사회』. 파주: 동녘.
- 백영서. 2013.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파주: 창비.
- 새머스, 마이클 · 이영민 외 역. 2013. 『이주 · Migration』. 서울: 푸른길.
- 서유경. 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2), 301-327.
- 앤더스, 베네딕트 · 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
- 왕후이 · 송인재 역. 2011. “제1장: 아시아에 대한 상상의 정치학.” 『아시아는 세계다』. 파주: 글항아리, 31-105.
- 윤인진. 2012.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41, 37-61.
- 윤인진. 2015.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남북하나재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공동 학술대회: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2015. 6. 4.), 19-55.
- 이수정. 2011.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KDI 북한경제리뷰』 13(10), 62-78.
- 이수정. 2014. “접촉시대와 경계의 (재) 구성.” 『현대북한연구』 17(2), 85-126.
- 이용승. 2016. “이주민의 지역사회통합과 주민권의 기능.” 『민족연구』 65, 4-25.
- 이용재. 2014. “다문화사회, 한국의 통일: 정체 (政體) 의 통일에서 생활 (生活) 의 통합으로.” 『동북아연구』 29(2), 5-37.
- 장은주. 2008. “상처 입은 삶의 빗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39, 14-34.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남북하나재단 www.koreahana.or.kr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연합뉴스
- 한겨레신문

● 투고일: 2016. 5. 9. ● 심사일: 2016. 5. 11. ● 게재확정일: 2016. 5. 17.

Social integration of denizens from North Korea, how to be possible?

Lee, Yongseung
(Daegu University)

29,137 people. This is the number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Bukhan Ital Jumin) who live in South Korea. If the regime of North Korea does not become stable including economy and security, outlook that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ill be increased from day to day does not require rigorous analysis. Then, how they are treated in South Korea? What about their situation? Who they are, and how discrimination against them works?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for exploring the way of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Under the premis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n have an inherent duality and duplicity of property, they have an implication of litmus paper that put unification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test, of sprouting of open nationalism as the others, of a compass of sounding out the possibility of East Asian community, of a symbol of the Korea's tragic history, of embodiment of beyond border experience. The causes of discrimination can include: negative perception to the North Korea, eyes looking down the under developed countries, reverse discrimination arising from similarity, sense of duty for incorporation, dual alienation. Then I explain why the discrimination in question. The reason is that discrimination can produce the second-class citizens, contract the unification directivity, and collapse the meaning of East Asian community. The paper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on the premise that the reflection of main stream's perception is key point, which are the redefin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minority, changing in terminology, reflection on nationalism and feeling of irritation, arrangement of the weak protection system in South Korea, discourse of denizenship,

and recognition of identity. In conclusion, from an angle that future value which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is 'dignity', I propose some exploratory opinions for decent social integration.

〈Key words〉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Denizens from North Korea), Discrimination, Social integration, Denizenship, Decent society